

**01. ①**

① (×) 상업등기는 객관적 사실을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상이한 사항을 등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즉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진실과 다른 내용이 등기되더라도 그 등기사항을 믿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대법원도 회사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합자회사의 사원에 관한 등기가 부실등기인 경우 그 부실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하여 그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는 될 수 없다는 뜻의 판시를 한 바 있다(대판 1996.10.29. 96다19321). ... 상업등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된 사항이 진실하다는 사실상의 추정력이 있다. ... 상업등기에는 예외적으로 등기된 사항이 적법하다는 법률상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예를 들어, 상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상호의 등기에는 이와 같은 법률상의 추정력이 부여되어 있다.

=>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므로라는 표현은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라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② (○) 상업등기법 제77조에 의하면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 등기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상업등기규칙 제169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말소등기를 위한 첨부정보는 법률상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기된 사항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문’은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가 될 수 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903-1호에 의하여 보더라도 확정된 신주 발행부존재확인 판결을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신청한 신주발행의 변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취지의 경정등기신청은 상업등기법 제7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말소등기신청이며, 상업등기법 제26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③ (○) 등기예규 제1776호 3. 다. 1) (ㄴ)에 의하면 법인 또는 합자조합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지점(분사무소를 포함) 또는 지배인(대리인을 포함)에 관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하고, 증명문구에 기재를 생략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는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④ (○) 상업등기규칙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법인등록번호 등 해당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신청인이 청구한 사항을 기록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⑤ (○) 상법 제13조에 의하면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지배인)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02. ③**

① (○) 상업등기선례 제2-5호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방법]에 따르면 법인의사록의 인증과 사서증서의 인증은 인증의 대상, 인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 내용, 인증 이후 서류의 보관방법 등이 다르고 「공증인법」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방법으로는 법인의사록의 인증방식만 가능하고 사서증서의 인증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② (○)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룰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대판 2004.9.24. 2004다28047)

=> 판례를 이해해 본다. 첫째,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룰 수 없게 된다. 둘째,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다. 셋째,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에 기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다.

③ (×) 상업등기선례 제2-4호에 따르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자신청할 때 위임인

## 【시대에듀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해설】

으로부터 받은 첨부서면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 등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하는데, 이때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된 문서에 공증인법 제66조의6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된 문서에 공증인법 제66조의6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표현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④ (○) 상업등기선례 제1-164호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가 회사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이사나 대표이사의 사임등기절차이행판결을 받아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사임등기에 의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나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 사임이사나 사임대표이사는 후임이사나 후임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나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그 사임등기는 후임이사나 후임대표이사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하거나 또는 일시이사나 일시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한 후에 할 수 있다.

=> 이해해 본다. 첫째, 주식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가 회사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이사나 대표이사의 사임등기절차이행판결을 받아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사임등기에 의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나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 사임이사나 사임대표이사는 후임이사나 후임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나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셋째, 사임등기는 후임이사나 후임대표이사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하거나 또는 일시이사나 일시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한 후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⑤ (○)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근간인 이사회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하므로(대판 2000.1.28. 98두16996), 상업등기선례 제2-112호에 따르면,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임기만료된 이사들의 후임이사를 선임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해서 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이해해 본다. 첫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다. 둘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 셋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근간인 이사회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넷째,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임기만료된 이사들의 후임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 다섯째,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해서 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 03. ③

① (○) 상업등기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상업등기법 제77조 각 호의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같은 법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다.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는 사유(상업등기법 제77조 각 호의 사유)와 동일하다. 상업등기법 제26조 제2호에 의하면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는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이자 동시에 상업등기법 제77조 제1호,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직권말소 사유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실행되었더라도 등기관은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② (○) 상업등기법 제26조 제5호에 의하면 등기의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업등기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공서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라도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해해 본다. 첫째, 등기의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둘째, 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셋째, 관공서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라도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 【시대에듀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해설】

③ (×) 상업등기법 제26조 제10호에 의하면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각하사유가 된다.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음에도 그 사항을 등기할 경우 실제관계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업등기법 제27조에 의하면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6조 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 이해해 본다. 첫째, 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각하사유가 된다. 둘째,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따라서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각하사유이다라는 표현과 등기할 사항에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④ (○) 상업등기법 제26조 제10호에 의하면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업등기법 제27조에 의하면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6조 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 이해해 본다. 첫째, 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각하사유가 된다. 둘째,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⑤ (○)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부존재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등기를 한 때에는 당해 이사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데, 말소의 결과 등기기록상 등기되어 있는 이사의 수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에 부족한 때에는 사임 또는 임기만료에 의해 퇴임한 전임이사의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 04. ⑤

① (○) 등기예규 제1547호 제8조에 의하면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의 문자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② (○) 등기예규 제1547호 제5조에 의하면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③ (○)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④ (○) 의료업의 영위를 영업의 종류로 하는 개인의 상호등기의 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⑤ (×) 등기예규 제1547호 제5조에 의하면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 따라서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 05. ①

① (×) 등기선례 제6-672호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신설합병절차에서 합병계약서에 일반적인 합병사항과 신설회사의 등기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이 합병계약서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되었다면 단지 보고만을 위한 창립총회는 상법개정으로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신설회사에 대한 설립등기도 등기사항이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회사설립에서 필요한 창립총회를 거칠 필요 없이 등기가 가능하다.

=> 따라서 신설회사에 대한 설립등기는 창립총회를 거쳐야만 등기가 가능하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② (○) 상법 제298조에 의하면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 【시대에듀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해설】

③ (○) 상업등기선례 제202206-1호[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거부]1.의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는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인 상업등기법 제29조는 민법 법인(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법인은 이미 설립된 영리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가칭 ‘사단법인 ○○○자산공제회’와 ‘○○○자산공제회 주식회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인 상업등기법 제2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④ (○) 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1호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는 주식회사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⑤ (○) 상업등기선례 제1-154호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대표이사 또는 새로이 취임하는 대표이사가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국적자라면 등기신청서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주소는 외국인등록표등본에 나타난 국내 체류지로 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 06. ②

① (○) 등기예규 제1538호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의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이사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이 없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사의 주소를 삭제한다. 1. 이사가 1명 또는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인 회사가 이사를 3명 이상으로 변경하거나 이사가 1명인 회사가 이사를 2명(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등기 및 종전 이사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2명(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남아있는 때에는 남아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만 신청하여야 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② (×) 상법 제4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상법 제40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집행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③ (○) 상업등기선례 제1-164호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어나 대표이사가 회사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이어나 대표이사의 사임등기절차이행판결을 받아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사임등기에 의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어나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 사임이어나 사임대표이사는 후임이어나 후임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어나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그 사임등기는 후임이어나 후임대표이사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하거나 또는 일시이어나 일시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한 후에 할 수 있다.

=> 이해해 본다. 첫째, 주식회사의 이어나 대표이사가 회사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이어나 대표이사의 사임등기절차이행판결을 받아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사임등기에 의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어나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 사임이어나 사임대표이사는 후임이어나 후임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어나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셋째, 그 사임등기는 후임이어나 후임대표이사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하거나 또는 일시이어나 일시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한 후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④ (○) 등기예규 제1536호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와 함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해해 본다. 첫째,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둘째,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와 함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⑤ (○) 상법 제383조 제3항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 【시대에듀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해설】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상의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란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말하고, 임기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또는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0.6.24. 2010다13541)

=> 이해해 본다. 첫째,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셋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란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말한다. 넷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란 임기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또는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 07. ③

① (○)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더라도 그 가처분이 따로 실효될 때까지 그 대표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법 제407조 및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해당 회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대판 1992.5.12. 92다5638)

=> 이해해 본다. 첫째,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더라도 그 가처분이 따로 실효될 때까지 그 대표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이다. 둘째, 원칙적으로 해당 회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② (○)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4호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③ (×)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임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퇴임할 당시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가 충족되어 있는 경우라면 퇴임하는 이사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과 동시에 당연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무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 허용된다.(대결 2009.10.29. 2009마1311)

=> 이해해 본다. 첫째, 퇴임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다. 둘째, 퇴임할 당시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가 충족되어 있는 경우라면 퇴임하는 이사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과 동시에 당연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는 것이다. 셋째, 퇴임하는 이사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무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 허용된다. 따라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④ (○) 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제104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 대표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함과 동시에 동일 직위에 재취임하여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를 등기실무상 중임이라고 한다. 상업등기선례 제2-32호에 따라서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경우 2006년 7월 30일에 설립등기를 한 회사의 이사의 임기만료일은 2009년 7월 30일이며, 이사가 임기만료 직전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고 그 임기만료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인 2009년 7월 31일이 중임일이 된다. 따라서 상업등기선례 제2-27호에 따라서 그날(=중임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사의 중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이해해 본다. 첫째, 이사, 대표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함과 동시에 동일 직위에 재취임하여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를 등기실무상 중임이라고 한다. 둘째,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경우 2006년 7월 30일에 설립등기를 한 회사의 이사의 임기만료일은 2009년 7월 30일이며, 이사가 임기만료 직전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고 그 임기만료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인 2009년 7월 31일이 중임일이 된다. 셋째, 그날(=중임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사의 중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⑤ (○) 법인의 임시이사가 이사로서의 직권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한 정관은 유효하다(대판 1963.12.12. 63다449)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08. ④

① (○)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386조 제2항에 정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는 별도로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상대로 해임사유 존재나 임기만료·사임 등을 이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대결 2009.10.29. 2009마1311)

=> 이해해 본다. 첫째,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셋째, 별도로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상대로 해임사유 존재나 임기만료·사임 등을 이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② (○) 상법 제409조 제1항에 의하면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상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면 감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 반면, 상법 제415조, 제385조에 의하면 감사의 해임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③ (○) 상법 제393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이사회 내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지만, 상법 제41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④ (×) 상법 제415조의2 제7항, 제296조 제1항, 제312조에 의하면 회사 설립 시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때에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따라서 모두 창립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⑤ (○) 상법 제391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하지 않은 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그러나 상법 제415조의2 제3항에 의하면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선임요건보다 해임요건을 가중한 것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09. ①

① (×) 상법 제516조의11, 제351조에 의하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변경등기는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그 청구가 있는 달의 말일부터 2주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상업등기 실무 2에 따르면 주식의 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바로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등기해태기간의 계산은 그 효력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 이해해 본다. 첫째,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변경등기는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그 청구가 있는 달의 말일부터 2주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둘째, 주식의 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바로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셋째, 등기해태기간의 계산은 그 효력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등기해태기간의 계산은 그 효력이 발생한 달의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이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② (○) 상법 제49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 【시대에듀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해설】

③ (○) 상법 제516조 제2항, 제350조 제2항에 의하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전환청구기간 내에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④ (○) 상법 제513조 제2항에 의하면 전환사채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결의사항으로도 할 수 있는데, 신주발행이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해서는 정관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판 1999.6.25. 99다18435)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⑤ (○) 주권제출공고는 상업등기선례 제1-196호에 따라서 회사가 사실상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상업등기선례 제1-199호에 따라서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없다. 그리고 상업등기선례 제1-196호에 따라서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권제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주식액면분할공고만을 한 것은 적법한 주권제출공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 10. ③

① (○) 상업등기선례 제2-55호에 따르면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소각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당연히 감소하지 아니하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할 수가 없다.

=> 이해해 본다. 첫째,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② (○) 상법 제609조 제2항에 의하면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도 해산하는데(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 사원총회의 해산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사원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법 제58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원총회의 해산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③ (×) 상업등기선례 제1-228호에 따르면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수 없고, 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채권자별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없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다.

=> 따라서 채권자별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기간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표현은 채권자별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없다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④ (○) 상업등기선례 제1-280호에 따르면 청산인이 채권신고의 공고와 최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상업등기규칙 등의 법령에서 첨부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산종결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⑤ (○) 주식회사가 해산(상법 시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경우를 포함)한 경우(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제외)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산 당시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이 된다.(대판 1981.9.8. 80다2511)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 11. ②

① (○) 상법 제591조에 의하면 유한회사는 자본금 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295조 제1항, 제302조 제2항 제9호, 제305조 제2항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자본금의 증가에 있어서는 주식인수 가액의 납입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만이 맡을 수 있으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납입기관에 관한 제한이 없어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납입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현물출자의 이행의 경우에도 감사인 등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 【시대에듀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해설】

② (×) 상법 제575조에 의하면 유한회사의 각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 따라서 언제나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③ (○) 상업등기선례 제1-64호에 따르면 합명회사의 사원은 재산, 노무, 신용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출자하여야 하고 정관의 규정으로써도 그러한 출자를 하지 않은 사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출자가 없는 자를 사원으로 정한 합명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은 수리될 수 없을 것이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④ (○) 상법 제287조의3, 제179조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 목적, ㉡ 상호, ㉢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본점의 소재지, ㉤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 자본금의 액, ㉦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 정관의 작성연월일 등이다. 상법 제287조의5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공고방법은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한편, 상법 제287조의5에 의하면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설립등기 시 등기사항은 아니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⑤ (○) 상업등기선례 제201612-2호에 따르면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하여야 하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주소는 국내 주소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영업소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반드시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둘 필요는 없다.

=> 이해해 본다. 첫째,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하여야 하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주소는 국내 주소로 제한되지 않는다. 둘째,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영업소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반드시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둘 필요는 없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 12. ②

① (○) 비송사건절차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4조, 제30조 등 관계법령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결 1990.12.7. 90마674)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② (×)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비송사건 관계인의 대리인은 소송능력자이기만 하면 충분하고,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법원이 비송사건의 당사자 본인을 출석하도록 명한 때에는 비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없다.

=> 따라서 당사자 본인을 출석하도록 명한 때에도 비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③ (○) 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 제119조에 의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청산인의 해임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따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헌재 2013.9.26. 2012헌마1005)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④ (○) 비송사건절차법 제3조에 의하면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이 경우 해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⑤ (○) 항고법원의 조사 범위는 항고 이유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법원은 불복의 대상이 된 제1심결정의 당부를 가리기 위하여 항고 이유의 주장 유무에 관계 없이 기록에 나타난 자료의 진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결 1982.10.12. 82마523)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 13. ②

① (○) 임시이사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통상항고로써만 불복이 가능하며, 일반 민사소송절차에서 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 (대판 1976.10.26. 76다1771) 임시이사선임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려면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와 민사소송법 제448조에 의하여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그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신청해야 하며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절차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는 없다. (대판 1963.12.12. 63다321)



## 【시대에듀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해설】

=> 이해해 본다. 첫째, 임시이사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통상항고로써만 불복이 가능하다. 둘째, 임시이사선임결정에 대하여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에서 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셋째, 임시이사선임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려면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와 민사소송법 제448조에 의하여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그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신청해야 한다. 넷째, 임시이사선임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려면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절차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② (×)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길 수 있으며,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대결 2009.11.19. 2008마699[전합])

=> 이해해 본다. 첫째,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니다. 둘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길 수 있으며,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를 유추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③ (○) 신탁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법에 따른 사건(이하 “신탁사건”이라 한다)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④ (○) 신탁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40조 제1항·제3항에 의하면 신탁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종료의 청구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에 따른 재판을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⑤ (○) 법원은 신탁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검사인의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8에 의하면 검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 14. ③

① (○) 비송사건절차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대위허가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인 채권자가,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 제50조 제3항에 의하면 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에 의하면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대위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8조다만 법원은 항고심의 재판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정지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② (×) 비송사건절차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은 신주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면 심문은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송사건절차법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재판은 총주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따라서 심문은 위 기간 내라도 할 수 있으며라는 표현은 심문은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③ (○) 비송사건절차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상법 제481조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10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허가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으나, 허가신청을 인용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④ (○) 민법 제829조 제4항에 의하면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등기가 효력요건이 아닌 대항요건이므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부 상호 간에는 그 효력이 있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⑤ (○)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15. ⑤

① (○) 등기의무자의 고의·과실 : 상업등기의 해태에 관하여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지는 불분명하다(행정질서벌에 있어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대판 2000.5.26. 98두5972) 그러나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관은 등기해태에 대하여 고의·과실이 있는지 또는 그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등기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과태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본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② (×)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 의하면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따라서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나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③ (○)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에 의하면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상업등기 실무 1에 따르면 등기해태와 관련하여 상법은 제635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 부과 측면에서 등기를 신청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자는 회사가 아니라 상법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집행사원, 이사, 외국회사의 대표자 등이 된다. 따라서 업무집행사원, 이사 및 외국회사 대표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④ (○)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 검사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으므로 정식절차에서는 약식재판의 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약식절차에 의한 결정과 정식절차에 의한 결정 사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약식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남발을 막고, 당사자에게 불의타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식결정문을 작성하면서 상용구로 “과태료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정식절차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는 실무례도 있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

⑤ (○) 상법 제491조 제2항에 의하면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회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491조 제3항, 상법 제366조 제2항에 의하면 청구가 있는 후 지체 없이 집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 따라서 옳은 표현이다.